

【일련번호: JJ】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 의 요 구

제 목 불필요한 서류 징구
소 관 부 서 ○ ○
조 치 부 서 ○ ○
내 용

1. 현황(불필요 서류 징구 내역)

적 요	지급금액 (천원)	지급일	지급명령 지출번호	계약상대자	비고
계	47,473			3곳	
●● 정비공사 관급 자재(레미콘)	2,430	201X.XX.XX.	XXX	◆◆	국세,지방세납 세증명 징구
○○ 정비공사 관급자재 (아스콘 구입)	20,240	201X.XX.XX.	XXX	□□	국세,지방세납 세증명 징구
◇◇유지관리사업	24,803	201X.XX.XX.	XXX	■ ■	국세,지방세납 세증명 징구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후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6장 제3절의 규정의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경우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의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31177(201X.XX.XX.), △△-1108(201X.XX.XX.), △△-819
(201X.XX.XX.)호와 관련하여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공사대금 및 보상금 등 지급

시 부서별 지출담당자는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3차례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8조에 따라 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함에 있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1. 현황과 같이 ●● 정비공사 관급자재(레미콘) 등 3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받은 경우로써 지출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함에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중복으로 제출 받는 등 계약상대자로부터 불필요한 서류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JJ】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처분 · 주의요구

제 목 장사업무 관련 민원문서 접수 처리 소홀
소 관 부 서 ○ ○
조 치 부 서 ○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매장·화장·개장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교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원문서 접수 및 민원문서 표시인 누락 상세내역]

관련자		업무담당기간	누락건수		비고
직급	성명		매장신고	화장신고	
—	A	201X.XX.XX. ~ 201X.XX.XX.	20	221	
—	B	201X.XX.XX. ~ 201X.XX.XX.	—	53	

2. 관계법령(판단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 제1항에는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 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201X.XX.XX. ~ 201X.XX.XX. 기간 매장 및 화장 신고서를 처리하면서 총 294건의 민원문서 접수 및 민원문서 표시인을 누락하는 등 민원문서 접수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장사업무 관련 민원문서 접수 처리를 소홀히 한 B와 A에게 ‘훈계’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ㄴ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업무 소홀
소 관 부 서 ○ ○
조 치 부 서 ○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대상자	표지유형	보행상 장애여부	표지상태	표지상태 변경사유	사망여부
○○○	장애인 본인용_주차가능	Y	유효	공동소유주 주소 상이	N
○○○	장애인 보호자_주차가능	Y	유효	공동소유주 주소 상이	N
○○○	장애인 본인용_주차가능	Y	유효	공동소유주 주소 상이	N
○○○	장애인 보호자_주차불가	N	유효	공동소유주 주소 상이	N
○○○	장애인 보호자_주차가능	Y	유효	공동소유주 주소 상이	N
○○○	장애인 보호자_주차불가	N	유효	공동소유주 주소 상이	N
○○○	장애인 보호자_주차불가	N	유효	공동소유주 주소 상이	N
○○○	장애인 보호자_주차가능	Y	유효	—	Y
○○○	장애인 본인용_주차가능	N	유효	—	Y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는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26조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불이행(7건) 하였으며, 사망자의 표지를 미회수(2건) 하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C, D, F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표지 및 사망자의 표지를 회수하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개보수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 ○
조 치 기 관 ○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계	도급액	관급액		
▲▲개보수 사업	-	○전석쌓기: L=134.m, A=280.8m ²	XX,XXX	XX,XXX	X,XXX	201X.XX.XX. ~ 201X.XX.XX.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와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기준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

명하게 적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설기계 대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해당 경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에서 201X.XX.XX. ▽▽과 XX,XXX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 개보수사업」의 경우,

계약 체결 후 내역서에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662,709원 반영하였고, 건설기계 대여자가 보호를 위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110,134원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준공 요청 시 사용불가 항목(교통안전시설물 등)으로 사용한 안전관리비 236,709원과 미발급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110,134원에 대하여 사용 내역 확인 후 정산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대금 XX,XXX천원을 지급하여 460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G에게 신분상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정산 없이 지급한 미사용 안전관리비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460천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ㄴ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건설공사 중기운반 설계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내 XXX XX 정비공사 외 4건의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과 예산 절감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이 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5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 여부, 설계도면 · 시방서 · 산출내역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 · 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 · 검측하고 품질 · 시공 · 안전 · 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히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에서는 추진한 ○○내 XXX XX 정비공사 외 4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를 확인한 결과, 포장공사, 배수로정비공사 및 하천정비공사의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대규모 도로개설 공사 시에 적용하는 토공장비(모터그레이더)의 운반비용을 적용하여 공사현장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과다 산정하였으며, 공사진행 단계별로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 부합 여부, 상호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사항 등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될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표 1]과 같이 5건의 공사대금을 정산 없이 지급하여 1,610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 중기운반 설계적용 부적정 내역]

연번	년도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정산금액 (천원)	도급자
					계	도급액	관급액		
		합 계			207,909	113,612	94,297	1,610	
1	201x	○○내 XXX XX 정비공사	-	-아스콘포장 A=1,303m ²	xx,xxx	xx,xxx	xx,xxx	300	●●
2	201x	▼▼ 안길 덧씌우기공사	-	-아스콘포장 A=3,130m ²	xx,xxx	xx,xxx	xx,xxx	300	◆◆
3	201x	— 정비 및 XXX 설치공사	-	-콘크리트포장 A=398m ² -아스콘포장 A=1,366m ²	xx,xxx	xx,xxx	xx,xxx	380	■
4	201x	<<<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	-배수로정비(D1000): 52m	xx,xxx	xx,xxx	xx,xxx	250	●●
5	201x	○○내ⅴⅴ안길 정비공사	-	-콘크리트포장 A=120m ² -아스콘포장 A=889m ²	xx,xxx	xx,xxx	xx,xxx	380	●●

※ 자료: ○○ 제출자료 재구성

처분 사항

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법령 등을 위배하여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H, I에게 신분상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설계변경 및 정산 없이 지급한 공사비 1,610천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시 정 요 구

제 목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소홀

소 관 기 관 ○ ○

조 치 기 관 ○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대상지 확인 및 변경 절차 미이행 따른 부정 지급내역

해당 지번	농지전용 인허가	건축 인허가	직불금 수령자	직불금 면적	해당 연도	금액		
						계	고정	변동
계						372,940	372,940	-
-	-	허가일자: `1x.xx.xx 착공일자: `1x.xx.xx 사용승인일자: `1x.xx.xx 단독주택 xx.xm ² 부지 xxxm ²	J	벼재배 xxxm ²	`1x	30,430	30,430	-
-	-	허가일자: `1x.xx.xx 착공일자: `1x.xx.xx 사용승인일자: `1x.xx.xx 창고 xxx.xxm ² 부지 x,xxxm ²	K	벼이외 xxxm ²	`1x	19,370	19,370	-
-	-	허가일자: 1x.xx.xx 착공일자: 1x.xx.xx 사용승인일자: 1x.xx.xx 사료공장 xxxm ² 부지 x,xxxm ²	L	배재배 x,xxx m ²	`1x	323,140	323,140	-

※ ○○ XXX XX-XX에서 분할된 ○○ XXX XX-XX XXXm² 변경신청 자료 없음

※ ○○ 내부자료에 따라 재 편집함.

2.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논농업”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제5호 “고정직접지불금”이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6호 “변동직접지불금”이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따르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X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1X.XX.XX~XX.XX.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XX.XX.까지 신청내용 현지(서면) 조사 및 심사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고, XX.XX.~XX.XX. 등록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수정(읍·면·동→시·군·구), 등록내용 변경사항 신청 및 신고,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 점검(농관원) 등의 절차를 거쳐 고정직불금은 9월 지급대상자 통장계좌 입금(시·군·구) 및 수령자 정보공개(30일 이내), 변동직불금은 익년 2~3월에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대상지 확인 및 변경 절차 미이행 따른 부정 지급내역과 같이 등록내용 변경사항 신청(신고) 기간 만료일인 XX.XX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 XXX XXX번지 외 2필지 3,559㎡에 대하여 변경사항 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고정직불금 372,940원을 착오 지급토록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장은

대상지 확인 및 변경 절차 미이행으로 착오 지급한 고정직불금 372,940원에 대하여 회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ㄴ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 의 요 구

제 목 소방안전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 ○
조 치 기 관 ○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 ○ 소방시설 현황

명칭	위치	층수	연면적	사용 승인일	소방시설
○ ○	-	지하1층 지상3층	X,XXX ㎡	`1X.XX.XX	소화설비(소화기 38,기타 2, 옥내소화전 8,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1식), 경보설비(감 지기, 발신5기 8,회로 37회로, 시각경보 기), 비상방송 1식, 피난설비(피난구 유도 등 2개소, 통로 2개소, 비상조명등 전층)

※ ○ ○ 내부자료에 따라 재 편집함.

2. 관계법령(판단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
감독,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지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지며,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에 각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1X.XX.XX.일자 201X년 하반기 인사 발령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변경 및 소방계획서 내용이 변경되어 소방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매년 2회(소방서 합동 1회, 자체 1회)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201X년도에는 ○○-15886(201X.XX.XX.)호 201X년 ○○ 청사 소방훈련 실시계획에 따르면 `1X.XX.XX.(목) 14:00~15:00 소방훈련을 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 그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1회는 미실시 하였음.

또한 201X년도에는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합동 또는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JJ】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 의 요 구

제 목 고성군 읍면장 관내 순찰 규정 이행 소홀
소 관 기 관 ○ ○
조 치 기 관 ○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장 근무 사항

직 위(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현 근무 처	비 고
-	M	201X.XX.XX. ~ 201X.XX.XX.	-	퇴 직
-	N	201X.XX.XX. ~ 현재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고성군 읍면장 관내 순찰 규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읍면장의 관할구역 순찰을 의무화하여 주요시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관내 동향을 파악하여 군민의 불편, 불만 요소를 사전 해소하는 한편, 취약요소를 점검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군민의 신뢰와 자치행정의 능률 향상을 꾀함에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순찰자), 제3조(순찰회수), 제4조(순찰시간), 제5조(순찰장소)에 따라 읍면장을 주 3회이상 근무시간내에 관할구역 일원 주요사업추진현장, 각종 사고 발생우려지역, 화재 발생우려지역, 무허가 행위우려지역, 민원 발생우려지역, 기타 취약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순찰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6조(순찰결과조치) 및 제7조(사후관리 등)에 따라 자체조치 가능사항은 즉시 조치후 기록 보존하고 자체조치 불가사항은 관련부서 보고 및 건의하고, 중요사항은 지휘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별지 순찰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8조(상벌)에 따라 동향파악, 취약요소의 발견 및 조치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도가 높을 경우 별도 시상하고, 순찰 불이행, 주요사안 조기 미발견, 행정조치 지연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201X. X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읍장 순찰일지 미작성 및 기록 유지 자료가 없어 읍장의 순찰 실시여부는 알 수 없게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장은

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ㄱㄱ】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처분 · 시정요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 ○
조 치 기 관 ○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농지 지번	농지 면적 (㎡)	취득 면적 (㎡)	지목	취득목적	발급일자	신청인	실태	비고
계		11필지						
-	XXX	XXX	전	주말체험 영농	`1X.XX.XX	O	XX 주차장	
-	XXX	XXX.X	전	주말체험 영농	`1X.XX.XX	P	XXXXX 적치장	
-	XXX	XXX	전	주말체험 영농	`1X.XX.XX	Q	XXXXX 옆 XXXX 및 XXXX 존치	
-	XXX	XXX.X	전	농업경영	`1X.XX.XX	R	XXXX 적치장	
-	XXX	XXX	전	농업경영	`1X.XX.XX	S	XXXXX 옆 XXXX 및 XXXX 존치	
-	XXX	XXX	답	주말체험 영농	`1X.XX.XX	T	불법건축물	
-	XXX	XXX	답	농업경영	`1X.XX.XX	U	일부 건축물 (XX)	
-	X,XXX	X,XXX	답	농업경영	`1X.XX.XX	V	일부 건축물 (XX)	
-	XXX	XXX	전	농업경영	`1X.XX.XX	W	주차장 (XX)	-
-	XXX	XXX	전	농업경영	`1X.XX.XX	Y	XXXX (주차장) 일부 XXXX	
-	X,XXX	X,XXX	전	농업경영	`1X.XX.XX	Z	XX 주기장	

2.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에 따라 민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읍장에게 신청한 경우 농지법 제규정 적합여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3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여부, 제4조 자격증명발급대상자 여부, 제6조 자격증명 신청자 적합여부, 제7조 제4항 공부 확인, 제8조 자격증명 발급요건 검토, 제9조 자격증명의 발급 및 미발급 사유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2016.12.19.일부 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가 아닌 토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농지 등에 대하여 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아래의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아래 예시 이외의 사유로 미발급 통보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대상 토지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 (“도시계획구역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
3.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4.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

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2016.12.19.일부개정) 제11조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1조 처분 명령과 매수 청구, 제62조 이행강제금 부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 2016.12.19.일부개정)에 따라 매년 9월 1일 기준 전년 9월 1일~당년 8월 30일(1년간) 중 농지이용실태를 매년 9월 1일~11월 30일(90일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지법령 및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과 같이 ○○ XXX XXX-X외 11필지 농지는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가 아닌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로서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나 상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과 같이 주말체험영농 또는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고,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출장복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처분권한이 있는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1조 처분명

령과 매수 청구, 제62조 이행강제금 부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대상 농지에 대하여 그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201X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대상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분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AA, BB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업무를 소홀히 한 CC에게 신분상 조치 ‘훈계’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해당 농지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ㄱㄱ】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 ○

조 치 기 관 ○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용 현황

대상자		계약일자	계약기간	분장사무	근로조건	연차·주차유급휴가 부여여부
주 소	성명					
-	DD	201X.XX.XX.	201X.XX.XX.~ 201X.XX.XX	-	60,240원/일	매월 연차수당 지급으로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	EE	201X.XX.XX.	201X.XX.XX.~ 201X.XX.XX	-	60,240원/일	“
-	FF	201X.XX.XX.	201X.XX.XX.~ 201X.XX.XX	-	60,240원/일	“
-	GG	201X.XX.XX.	201X.XX.XX.~ 201X.XX.XX	-	180,000원/일 월10일근무	예산 및 근로조건 사유로 주·연차유급휴일미부여
-	HH	201X.XX.XX.	201X.XX.XX.~ 201X.XX.XX	-	60,240원/일 월10일근무	“
-	II	201X.XX.XX.	201X.XX.XX.~ 201X.XX.XX	-	180,000원/일 월10일근무	“
-	JJ	201X.XX.XX.	201X.XX.XX.~ 201X.XX.XX	-	60,240원/일 월10일근무	“
-	KK	201X.XX.XX.	201X.XX.XX.~ 201X.XX.XX	-	66,800원/일	매월 연차수당 지급으로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	LL	201X.XX.XX.	201X.XX.XX.~ 201X.XX.XX	-	66,800원/일	매월 연차수당 지급으로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	MM	201X.XX.XX.	201X.XX.XX.~ 201X.XX.XX	-	180,000원/일 월10일근무	예산 및 근로조건 사유로 주·연차유급휴일미부여
-	NN	201X.XX.XX.	201X.XX.XX.~ 201X.XX.XX	-	66,800원/일 월10일근무	“
-	OO	201X.XX.XX.	201X.XX.XX.~ 201X.XX.XX	-	180,000원/일 월10일근무	“
-	PP	201X.XX.XX.	201X.XX.XX.~ 201X.XX.XX	-	66,800원/일 월10일근무	“

※ ○○ 내부자료를 참고로 작성함.

2. 관계법령(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같은 법 제48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그 유보된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근로계약 체결), 제12조(근로자관리카드 작성 등), 제17조(근무상황 관리), 제21조(임금지급상황 관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관리카드), 임금대장,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터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제5항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성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18조(휴일 등)에 따르면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고성군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고성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휴일)제1항에 따르면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고성군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제5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54조 (연차 유급휴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승인하는 경우 시간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휴가 8시간은 휴가 1일로 계산하고 용부서의 장은 근로자로부터 연차유급 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위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용 현황과 같이 201X.XX.XX.~201X.X월 감사일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 13명을 채용 사용함에 있어 근로관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명부(관리카드), 임금대장,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근로관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주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주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터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위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용 현황과 같이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연차수당 지급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부여하였고,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산 및 근로조건 사유로 주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ㄴ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시정요구

제 목 이륜자동차 등록면허세(등록분) 부과 부적정
소 관 부 서 ○ ○
조 치 부 서 ○ ○
내 용

1. 이륜자동차 등록면허세(등록분) 부과 부적정 현황

연도	납세의무자		차량번호	배기량 (cc)	등록일	등록구분	착오부과 세액(원)	비고
	성명	주민번호						
201X	QQ	-	경남고성 XXXXX	124	201XXXXX	이전등록	15,000	외 48건

※ 세부내역: 붙임 참조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자는 동법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등록분)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세율)에서는 차량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폐지(말소)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1만5천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서는 법제2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총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등록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됨.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에서는 201X.XX.부터 201X.XX.까지 이륜자동차 등록 업무를 함에 있어 등록면허세(등록분)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125CC 이하인 이륜자동차에 대해 착오로 등록면허세 49건, 735천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음.

처분 사항

실무담당자로서 이륜자동차 등록면허세(등록분)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실 RR, SS에게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착오 부과한 등록면허세(등록분) 735천원을 환급 조치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